

한성대신문

1976년 12월 15일 창간

www.hansungnews.com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제592호

지면안내 03 사회 구멍 뚫린 대학 내 개인정보

04 문화 어서오세요, 디저트의 세계로

06 기획 Next Level : 자율주행 시대

08 광고 제38회 한성문학상 현상공모

동아리평가 세부기준 미공개·이의신청 불가

본부 “동연 통해 안전 전달 시, 논의 가능하다”

2023학년도 1학기 동아리활동 평가(이하 동아리평가) 결과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지난 25일 안내됐다. 각 정 동아리(이하 동아리)의 등급이 공지됐으나, 등급을 결정 짓는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평가의 기준과 방법 또한 ‘과외활동 지도위원회’가 ▲대·내외활동실적 ▲동아리관리 ▲행사참여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내용만 공개돼, 구체적인 기준은 알 수 없었다. 동아리평가의 세부기준은 각 동아리에도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도 없는 상황이다. 일부 동아리는 세부사항이 각 동아리에 공지되고, 이의신청 과정이 신설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본부(이하 본부)는 동아리들이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를 통해 세부사항 공개와 이의신청 과정 신설에 대한 안전을 전달한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동아리평가는 학생지도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인 과외활동지도위원회가 매 학기마다 본교 39개의 모든 동아리를 평가하는 제도다. 학생처장과 과외활동 지도교수 대표 5인, 학생장학팀장이 소속된 과외활동 지도위원회는 각 동아리별 점수를 먼저 책정하고, 그 점수에 따라 등급을 매긴다. ▲공연예술분과 ▲학술분과 ▲체육분과 소속 동아리 중 분과 내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2개 동아리와 ▲종교분과 ▲평면예술분과 ▲취미봉사분과 소속 동아리 중 분과 내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1개 동아리가 A등급을 받는다. A등급에 들지 못하고 점수가 9.0점 이상인 동아리가 B등급, 6.0점 이상 9.0점 미만 동아리는 C등급, 6.0점에 미치지 못한 동아리가 D등급이다. 점수는 16점 만점이다.

평가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거나 동아리 퇴출 여부가 결정된다. A등급을 받

은 동아리에는 학기별로 65만 원, B등급과 C등급에는 각각 50만 원과 45만 원이 차등으로 지급된다. D등급을 받은 동아리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두 학기 연속 D등급을 받은 동아리는 제명된다.

일부 동아리는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이 공개되지 않는 현황에 대해 개선을 바랐다. 엄성호(사회과학 2) ‘IVF’ 회장은 “매 학기 동아리평가 때마다 동아리평가의 감점요인이나 보충할 항목의 예시와 같은 세부적인 결과들이 함께 통보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은정(AI응용 2) ‘H-LEP’ 전 회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등급이 낮게 나와 문의했을 때, 항목별 점수와 어떤 항목에서 점수가 부족했는지에 대해서만 들을 수 있었다”며 “어떤 점이 부족해서 점수가 깎였는지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본부는 평가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가 접수되면 항목별 점수와 총점을 공개하고 있다. ▲교내·외 동아리 활동 실적 ▲동아리방의 청결도 ▲생활수칙 준수 정도 ▲행사 참여도 등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항목표에 의거해, 각 동아리가 항목별로 얻은 점수와 총점을 전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세부사항 공개를 요청한 동아리가 없었기에, 위와 같은 안내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구현(학생장학팀) 조교는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가 나온 항목을 살펴보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 등을 전한다”며 “동아리평가 세부항목 점수는 동아리들의 개별정보이기 문의하기 전에는 따로 안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본부는 각 항목별 세부기준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안전이 동연을 통해 본부로 전달되면, 공개를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태민(학생장학팀) 부팀장은 “관련한 안전이 정식으로 본부에 전달되면,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동아리 대표자들이 동아리연합회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본부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동아리는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기를 바라기도 했다. 현재 평가의 세부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는 문의만 가능하며, 재평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이의신청 과정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안 전 회장은 “이의신청이 없는 현재는 각 동아리가 동아리평가에 대해 민주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공적인 자리가 부재하다”며 “이의신청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조성혁(사회과학 2) ‘경제학연구회’ 회장은 “동아리 이의신청 절차가 이

뤄진다면 동아리 운영진의 입장에서는 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본부는 이에 대해서도 동연을 통해 안전을 제출하면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외 다른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정식 안전 제출 과정이 선행돼야 본부 차원의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 조교는 “동아리 안에서 의견을 취합해 이의신청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제출하면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동연 측은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이하 전동대회)에서 동아리가 불편 사항을 본부에 전달하지는 안전을 내놓으면, 전동대회 표결을 통해 안전 전달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수연(기계전자 4) 동연회장은 “다음 달에 진행될 전동대회에서 구급품으로 불편 사항에 대한 건의를 받을 예정”이라며 “그때 세부기준 공개나 동아리평가 이의 신청 등의 사항이 제시되고 과반의 동아리가 원한다면 안전을 본부에 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신지원 기자 idj_b01@naver.com

한성대신문사

더 가까이

독자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웹사이트

www.hansungnews.com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hansungnews

에브리타임

게시판 > 한성대신문사

인스타그램

@hansungnews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동아리 박람회, 우천 속 성료

‘2023학년도 2학기 동아리 박람회(이하 동아리 박람회)’가 동아리 홍보와 구성원 간의 화합을 목적으로 8월 29일과 30일 양일간 개최됐다. 29일에는 잔디광장을 비롯한 학내 곳곳에 동아리 부스가 배치됐으나, 30일에는 우천으로 인해 모든 부스가 잔디광장에 배치됐다. 행사는 본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었다.

각 동아리 부스는 양일 모두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운영됐다. 동아리연합회를 비롯해 ▲공연예술부와 왕산악, 들불, 탈패, 한음, 낙산극회, TRIAX, NOD, brillante, 4호 선마이크 ▲종교부와 CCC, UBF, JOY 선교회, IVF ▲학술부와 H-LEP, 션들, FLASH, DC&M, ASPIRE, TeamODD, TIME ▲체육부와 HTM, 피닉스, 버팔로, 한검회, 한얼 ▲평면예술부와 P.I.G, 이무기, 영화다숨, 매나니로, 한성타이포 ▲취미봉사부와 유스호스텔, 해랑사리우, 별조각, 낭동이가 부스를 운영했다. 2일 차인 30일에는 한검회를 제외한 33개 동아리가 부스를 운영했고, 일부 공연예술부와 동아리의 공연도 함께 진행됐다.

풍물 악기 체험을 준비한 ‘탈패’는 ‘그쪽도 한성대 탈패를 아세요?’ 행사를 기획했다. 부스를 방문한 학생이 장구나 징을 치면 탈패 부원들이 팽고리와 북을 쳐 사물놀이를 체험해 보는 것이다. 김나연(인문 2) 탈패 회장은 “참여 학생들이 체험을 재미있게 즐기는 반응을 보았다”며 “악기 연주와 더불어 추억의 과자 판매 등을 통해 동아리를 홍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독교 동아리 ‘JOY 선교회’는 학생들이 고민을 메모지에 적으면,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고민을 말해봐!’ 행사를 진행했다. 뽑기를 통해 간식 세트 등의 상품을 지급하기도 했다. 광민(사회과학 3) JOY 선



▲‘DC&M’ 부원들이 직접 만든 VR 게임을 학생이 체험한다.

교회 회장은 “동아리 박람회는 JOY 선교회를 알리기 좋은 기회”라며 “좋은 취지로 활동할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고 전했다.

토론 동아리 ‘션들’은 위인들의 명언과 유명 도서의 제목을 맞히는 ‘퀴즈 여행하는 독서와 명언의 세계’를 준비했다. 김지태(인문 3) 션들 회장은 “션들이 학술부와 동아리이자 토론 동아리다 보니 퀴즈를 준비했다”며 “퀴즈에 대한 참여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테니스 동아리 ‘HTM’은 사랑이나 테니스 용품 등을 상품으로 내놓고 테니스공 색깔이나 테니스 코트의 특징 등을 맞히는 테니스 퀴즈를 진행했다. 일정 거리에서 테니스공을 던져 통 안에 넣는 게임도 함께 준비했다. 엄태익(패션 2) HTM 회장은 “동아리 박

람회를 통해 HTM을 처음 접한 이후 신입부원 모집에 지원한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동아리 박람회가 신입부원을 유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소회했다.

사진 동아리 ‘P.I.G’는 ‘사진 유형 테스트’ 결과에 따라 포토카드를 증정하는 행사를 준비했다. 어떤 사진을 선호하는지, 사진을 찍는 방식은 무엇인지를 묻는 자체 제작 테스트에서 유형을 도출해 그에 맞는 포토카드를 지급하는 것이다. 포토카드는 P.I.G 부원들이 직접 찍은 사진으로 제작됐다. 이상언(컴공 2) P.I.G 회장은 “부원들이 직접 찍은 사진으로 포토카드를 만들어 동아리를 알릴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밝혔다.

천체 관측 동아리 ‘별조각’은 ▲지구, 달 그리기 대회 ▲천체, 별조각 관련 퀴즈 ▲별



▲‘JOY 선교회’ 부스에서 참여자들이 소원을 적는다.

자리, 천체 관련 타투 등을 진행했다. 강민서(컴공 3) 별조각 회장은 “퀴즈를 직접 만드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참여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아 준비한 만큼 성과가 있는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동아리연합회 ‘ReNewAll’의 부스에서는 참여 학생들이 동아리 박람회 팸플릿에 스티커를 부착해 가져오면, 그 개수에 따라 상품을 지급했다. 각 동아리에서 체험 후 각각 다른 분과에 소속된 동아리의 스티커를 2개 이상 받아 오면 비교과 포인트 10pt를 지급하고, 무료로 ‘영수증 사진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스티커가 6개 이상이라면 상품추첨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었다. 추첨을 통해 ▲나이키 버킷햇+토이카메라(2명) ▲스타벅스 E-Gift Card 2만 원권(4명)

▲핸디선풍기(20명) ▲상상부기 인형(30명) 등의 상품이 지급됐다. 또한 동아리 박람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 동아리연합회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해 스토리에 업로드하면 사랑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함형범(컴공 3) 학생은 “동아리 부원들의 노력이 대단하다”며 “새 학기의 시작을 알리는 느낌이었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행사를 기획한 전수연(기계전자 4) 동아리연합회장은 “참여 학생들이 동아리 가입 전 동아리를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했다”며 “날씨 때문에 갑작스러운 변동 사항이 많아 당황스러웠지만 성공적으로 진행돼 다행”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유성 기자 meteor11@hansung.ac.kr

1차 대의원총회서 학생자치기구 예산안 확정



▲대의원들이 학생자치기구 예산안에 대한 찬성 팻말을 들고 있다.

‘2023학년도 하반기 1차 대의원총회(이하 총회)’가 지난 14일 개최돼, 주요 학생자치기구의 하반기 예산안이 통과됐다. 모든 예산안은 재적 대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인준된 예산은 총 35,164,760 원이다.

총학생회 ‘이음’의 예산안으로 총 3,011,020 원이 승인됐다. 세부 항목으로는 ▲개강 축제 ▲학잡 공모전 ▲복합기 대여 ▲사업예비비 ▲일상운영비 등이 있다.

총대의원회 ‘청아’는 예산으로 총 4,778,880 원이 인준받았다. ▲총선거 ▲대의원 총회 ▲개강 축제 ▲우수 대의원 선정 ▲일상운영비 ▲사업 예비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학생복지위원회 ‘채움’의 예산은 4,315,150 원이다. 채움이 인준 받은 예산은 ▲대여 사업 추가 구매 물품 ▲간식 사업 ▲템플릿 공모전 ▲모니터링단 ▲빼빼로 이벤트 ▲개강축제 ▲사업 예비비 ▲일상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다.

동아리연합회 ‘ReNewAll’은 657,660원을 책정받았다. 예산은 ▲천체 동아리 대표자

회의 ▲23-2 동아리박람회 ▲23-2 동아리 평가 ▲23-1 동아리감사 ▲동아리 대외사업 보수 ▲사업 예비비 ▲일상 운영비 등에 쓰일 예정이다.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학생회 ‘구름’은 예산으로 4,038,960원을 승인받았다. 세부적으로 ▲인문예술대학 단대 MT ▲인문예술대학 체전 ▲개강 축제 ▲프린트 대여 ▲사업예비비 ▲일상운영비 등의 항목이 존재한다.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사월’은 4,227,080원을 인준받았다. 세부 항목은 ▲프린트 사업 ▲사회과학대학 연합 MT ▲개강축제 ▲사업예비비 ▲일상운영비 등이 있다.

디자인대학 학생회 ‘MOTIVE’의 예산으로 4,000,920원이 승인됐다. 이는 ▲물품 대여 사업 보수 ▲프린트 대여 사업 보수 ▲디자인대학 연합 MT ▲짜선배 짜후배 ▲개강축제 ▲사업 예비비 ▲일상 운영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IT공과대학 ‘늘찬’은 5,907,040원의 예산을 인준받았다. 예산안 내 품목에는 ▲MT ▲개강 축제 ▲사업예비비 ▲일상운영비 등이 포함됐다.

창의융합대학 ‘담아’가 인준받은 금액은 4,228,050원이다. ▲개강축제 ▲창용멘토링 발표회 ▲너의 고민을 담아 ▲MT ▲창용체전 ▲창용인의 밤 ▲한글날 행사 ▲2023을 끝내며 ▲프린트 대여 ▲학사발령 인쇄 ▲사업 예비비 ▲일상운영비 등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다.

광동민(사회과학 4) 총대의장은 “예산안의 결이 학기 시작 시기의 주요사항인데 잘 진행돼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신지원 기자 idj_b01@naver.com

개강 축제 성황리에 마무리

‘개강 축제’가 지난달 31일 본교 잔디광장에서 개최됐다. ▲총학생회 ‘이음’ ▲총대의원회 ‘청아’ ▲학생복지위원회 ‘채움’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학생회 ‘구름’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사월’ ▲디자인대학 학생회 ‘MOTIVE’ ▲IT공과대학 학생회 ‘늘찬’ ▲창의융합대학 학생회 ‘담아’가 부스를 운영했다. 각 부스는 학생들이 간단히 즐길 수 있는 게임과 상품 등을 준비했다. 더위를 호소하는 일부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 음료나 빙수 등을 판매하는 부스도 있었다.

이날 ‘이음 노래방 시즌2’도 함께 개최됐다. 미리 진행된 1차 심사를 통과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예선과 본선이 진행됐다. 본선이 종료되고 현장에서의 관객 투표표를 통해 순위가 확정됐다. 1위부터 3위까지 순서대로 ▲에어팟 3세대 ▲커피머신 ▲백화점 상품권 등이 증정됐다. 최종



▲‘구름’의 부스에서 학우들이 플라로이드로 사진을 찍는다.

1위를 차지한 장민서(무용 2) 학생은 “제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옆에서 응원해 주고 도와줘서 1위가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개강 축제에 참여한 한민서(패션 1) 학생은 “행사 전반적인 분위기가 밝고 재밌다”며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승희(IT융합 4) 총학생회장은 “개강 축제는 처음 진행하는 행사라 일부 부족했던 부분도 있어 보인다”며 “개강 첫 주차임에도 많은 학우분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다”고 전했다.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중고 서적 플리마켓 진행



▲학생이 중고 서적 플리마켓에서 서적을 구매하고 있다.

‘중고 서적 플리마켓(이하 플리마켓)’이 8월 31일, 9월 4일부터 6일까지 운영됐다. 개강을 맞아 전공·교양 서적에 대한 수요

가 늘어남에 따라 진행된 플리마켓에서 학생들은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중고 서적을 구매할 수 있었다. 플리마켓은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이하 사과대) 학생회 ‘사월’과 총학생회 ‘이음’의 공약 사항으로, 두 학생자치기구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플리마켓에서는 교내 수업에서 사용되는 서적의 판매 혹은 무료나눔이 이뤄졌다. 학생들이 판매를 위해 접수한 서적 8권은 판매 대상이었고, 글로벌비즈니스트랙 학생회 ‘백야’가 무료로 제공한 51권의 서적은 무료나눔 대상이었다. 결과적으로 총 4권이 판매되고 15권이 무료나눔됐다. 남은 서적은 서적 접수자와 백야가 회수했다.

무료나눔을 통해 서적을 구한 정동훈(사회과학 4) 학생은 “무료라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라며 “추후에 개최된다면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진형(사회과학 3) 글로벌비즈니스트랙 학생회장은 “필요한 학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서적을 무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박진성(사회과학 3) 사과대 학생회장은 “새 책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 행사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승희(IT융합 4) 총학생회장은 “플리마켓 진행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학우분들께 감사하다”며 “추후 재진행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건희 기자 enqnk@hansung.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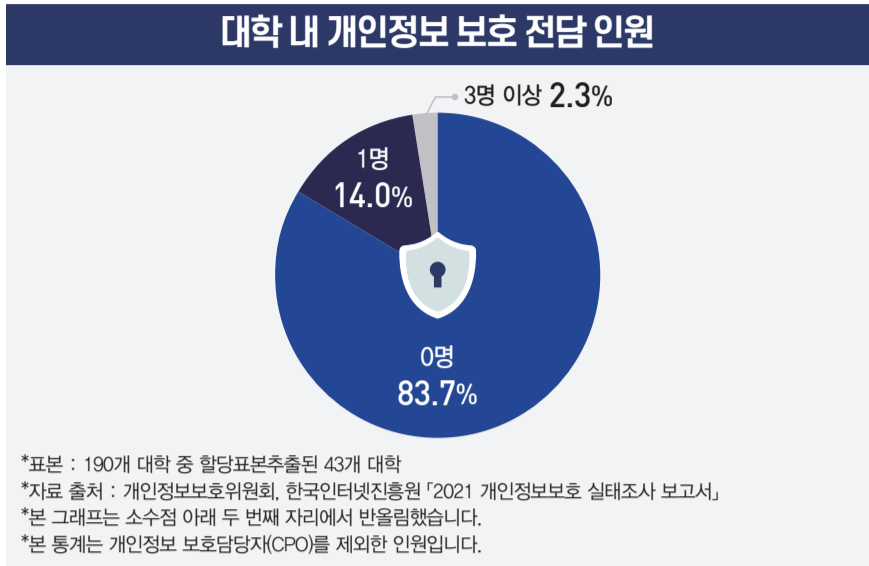
구멍 뚫린 대학 내 개인정보

대학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알려진 대학만 약 5곳에 이른다. 대학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학내 정보시스템 등에 외부인이 침투해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학내 시스템 전환 작업 도중 오류가 발생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던 사고가 벌어졌다.

교육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학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각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진단(이하 수준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보보호 수준을 진단하고, 교육부 검증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진단 결과를 정한다. 진단 결과는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분야 각각에서 ▲우수 ▲보통 ▲미흡 ▲미실시의 단계로 나뉜다.

하지만 수준진단에서 우수 혹은 보통 등급을 받은 대학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신뢰 불가한 지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대학 중 일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해에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각각 우수와 보통 진단을 받았다. 채은선(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화법제도센터) 수석 연구원은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대학이 개인정보 보호에 충분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관련 예산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기 대학 내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이 적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21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보고서」(이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43개 대학 중 48.8%의 대학이 개인정보 보호 예산으로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원이 전무한 대학은 8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타 업무를 병행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인원이 1명인 대학은 34.9%, 2명인 대학이 37.2%, 3명 이상인 대학이 18.6%로, 대학들은 주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타 업무와 병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채 수석 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 예산에 인건비가 포함되는 경우, 연봉 등을 고려하면 1억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은 1번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전담 담당자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영진(배재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부 정보보안학) 교수는 "대학 예산 배정 과정에서 정보 보호 예산이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학의 자체적인 진단이 교육부의 수준 진단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 수준진단의 신뢰성을 저하시킨 요인으로 지적된다. 김명주(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대학 내 조사가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대학의 관련 예산 부족 원인으로는 안이한 인식이 꼽힌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 관련 인식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대학 경영진이 보안을 비용적 측면에서만 생각하고, 투자 대비 결과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진단을 위해서는 대학 내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교육부 검증 이전에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보보호 수준을 진단하는 과정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전문성을 갖춘 전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채 수석 연구원은 "수준진단을 받으려면 기관 내부에서 자료 등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전담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인력 확충을 위해 예산 확보는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신 교수는 "현재 개인정보 보호 예산이 충분한 곳이 많지 않기에 앞으로 예산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 수석 연구원은

"대학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특성을 고려해 대학별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국가가 개인정보 보호에 쓰이는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가 일부 제기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가 잘 이뤄지지 않는 대학 중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대학에 한해, 정부가 취약점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고 전했다.

대학 구성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 대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개인정보에 충분한 보호가 필요함을 인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서 개인정보를 처리·취급하는 기관·기업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의무인 상황이다. 채 수석 연구원은 "대학생에게도 개인정보 취급과 처리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교육한다면, 대학 및 전 국가적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인정보 보호 업무가 주요 사항으로 고려되도록 하려면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 개인정보 보호 항목을 평가 기준으로 추가하는 방안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학이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대학이 개인정보 보호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정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하면 대학의 자발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희 기자 enqnk@hansung.ac.kr

그 법의 어제와 오늘

중대법의 더 나은 쓸모를 위하여

경기도 성남시의 '정자교'가 붕괴돼 2명이 사망한 사건을 기억하는가. 최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인 성남시장이 책임자로 지목되며, 사고 5개월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시민재해' 1호 입건으로 이목을 끌었다. 인재(人災)의 발생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이르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완벽한 법률이 되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등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유해 요인으로 인해 ▲노동자의 사망 ▲2명 이상의 부상자 발생 ▲3명 이상의 직업성 질병 환자 발생의 경우에 해당하면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된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공교통수단에서 설계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10명 이상의 부상자나 질병자가 나온 사고를 지칭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책임자로 보고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인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산업재해로 약 1,700여 명에서 2,100여 명이 숨졌다. 2018년 발생한 산업재해인 이른바 '김용균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도화선이 됐다.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사망이었기에 '최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노동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영계의 반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번번이 제정에 이르지 못했다.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하청 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원청 업체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박이 있었다.

결국 2021년 1월 김용균 사건이 벌어진 지 2년만에 법이 제정됐고, 이듬해 시행됐다.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기업 총수, 고위 공무원 등 최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권이 확보된 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완전히 예방하기에는 여전히 빈틈

이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안전 체계를 갖추기에 영세하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사망자는 572명으로 여타 규모의 사업장에 비해 많았다. 또한 노동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는 꼼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손익찬(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변호사는 "사업장 쪼개기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피할 목적으로 이전부터 나타나던 현상"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지적했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장소를 특정하고 있다는 것 또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공중이용시설'이 어느 곳인지 특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되는 시설에서 벌어진 재해여야 중대시민재해로 판단될 수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가 협소한 탓에, 큰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로 10·29 참사는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규모 재난이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일반 도로는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아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때문에 장소를 지나치게 특정하기보다는 위험 방지 의무가 지켜지고 예방 조치가 이뤄졌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손 변호사는 "지금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의 범위는 좁다"며 "재난 예방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의 명확한 개선점은 보완해 나가되, 얼마나 실효성을 갖는지 꾸준히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시행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기에, 실효성을 파악하며 법률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영만(법무법인 이목) 변호사는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효성과 부작용을 확인하면서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법률은 보완해 나가되, 현장은 법률에만 의존하지 않고 안전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신문사

제보하기

학생의 권리를 앞장서 대변하겠습니다

Tel : 02)760-4186

Fax : 02)760-4389

E-mail : hansungnews@gmail.com

KakaoTalk : @hansungnews

Instagram : @hansungnews





“요즘 애들은 왜 그래?” 어느 세대나 그랬듯, 현 젊은 층도 자주 듣는 물음이다. 진짜 요즘 애들은 왜 그럴까? 그래서 알아봤다.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만 보면 사족을 못쓰고 달려드는 기자가 그 속으로 뛰어 들었다. MZ세대의 대표주자인 기사를 따라 청년이 열광하는 것을 파헤쳐보자. 디저트 배, 밥 배 따로 있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배불러도 들어가는 달콤한 디저트, 최근 청년들은 기존보다 다양하고 이색적인 디저트를 찾아 즐기고 있다. 애니메이션에서 현실로 튀어나온 형형색색의 메론소다, 변화기만 가면 보이는 탕후루, 대용량으로 돌아온 추억의 간식인 구슬 아이스크림, 더 다양하고 화려해진 도넛까지, 청년의 입맛을 사로잡은 디저트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어서오세요, 디저트의 세계로

그냥 맛있어서 먹나요?

최근 젊은 세대는 이전보다 더 다양하고 이색적인 디저트를 소비하고 있다. 이들에게 디저트는 단순히 먹는 행위로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경험을 일종의 ‘놀이’ 행위로 여긴다. 이영애(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먹거리는 재미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데 있어 적합한 수단이다. 디저트는 그러한 경험을 즐기는 젊은 세대의 특징을 잘 반영한 소비 품목”이라고 전했다.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최근에 등장해 기존에 보지 못한 디저트를 경험하고, 이를 SNS에 인증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자신이 경험해 본 디저트를 타인에게 공유하기를 즐기는 것이다.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1학년 재학 중인 박선우 학생은 “청년들이 요즘 SNS에서 유행하는 디저트를 접하고 ‘한번 먹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 디저트를 판매하는 가게로 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할머니얼’ 열풍이 불며 개성주악, 약과 등 전통 디저트가 유행하던 것도 잠시, 해외에서 유행한 디저트들이 국내 청년들 사이에 사랑받고 있다. 국내 디저트에서 다시 해외의 디저트로 인기가 번지는 일종의 반작용 현상이다. 이 교수는 “옛날 디저트류에 관심을 가졌다가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디저트들이 다양화되고 있기에 이를 경험하고자 하는 성향의 청년들이 많이 등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D 밖으로 나온 나만의 메론소다

새로운 디저트로 등장하며 이목을 끌

고 있는 ‘메론소다’ 역시, 디저트 양상 변화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유행하던 메론소다는 애니메이션에 자주 등장하며 그 모습을 드러냈다. 메론소다는 멜론향 시럽과 탄산수가 섞인 음료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올라간 디저트다. 청년들은 기존에 보지 못했던 디저트의 등장으로 ‘무슨 맛일까’ 하는 호기심을 갖게 됐다. 동덕여자대학교 문예창작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김민지 학생은 “일본에서 건너 온 디저트라 새로운 느낌을 받았다”며 “흔히 보이지 않는 색, 조합, 모양새가 관심을 끌기 충분했다”고 술회했다.

애니메이션을 기점으로 확산된 메론소다는 처음 유행하기 시작할 당시만 해도 카페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디저트였다. 그렇기에 청년들은 직접 재료를 조합해 메론소다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 일명 ‘메론소다 레시피’의 유행이다. 청년들은 카페로 가 기본적인 멜론 음료에 ‘탄산수 변경’, ‘아이스크림 추가’ 등의 옵션을 더해 자신만의 메론소다를 만들어 먹는다. 기자도 카페에 들어가 SNS상에서 유행하는 메론소다 레시피를 꺼내들었다. 적혀진 요리법대로 재료를 추가해 음료를 주문했다. 시원한 탄산수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조화가 어우러진 맛이였다. 만들어 먹어보니 메론소다 레시피는 기존의 없던 것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자신의 취향을 반영하기 좋다. 기존에 없던 메뉴를 직접 만드니, 더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눈길 먼저 간다

맛의 다양성으로 승부를 보는 디저트도 있다. 바로 도넛이다. 단순한 원형 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형태를 넘어 이제는 캐릭터 모양과 햄버거처럼 빵 사이 크림이 듬뿍 들어간 모양의 도넛까지, 그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응철(덕성여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도넛의 맛을 넘어 외형까지 신경 쓰며 도넛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눈길이 가는 예쁜 포장 상자 또한 청년층이 도넛을 찾는 이유 중 하나다. 실제로 예쁜 포장으로 유명한 도넛 가게를 찾아가 구매해 봤다. 주문한 도넛을 받아 생각지 않은 선물을 받는 느낌이 물씬 났다. 귀여운 그림이 그려진 종이 가방과, 선물 상자 같은 도넛 박스 형태가 마음을 사로잡는다.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청년층이 도넛에 빠지는 데에는 분명 이러한 예쁜 포장이 한몫했을 터다. 신한대학교 토지행정학과 1학년 재학 중인 최다인 학생은 “포장이며 도넛이며 다 예뻐서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기 좋을 듯하다”고 전했다.

추억의 간식을 대용량으로

‘질보다 양’으로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디저트가 있다. ‘대용량’으로 즐기는 구슬 아이스크림이 최근 들어 인기를 끌고 있다. 손바닥 안에 들어오던 구슬 아이스크림이 거대한데 됐다. 기자가 직접 대용량 구슬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상점으로 가서 구매해 봤다. 구매해 보니 확실히 ‘일종의 보복심리가 작용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피어오른다. 이제는 구슬 아이스크림을 자신의 돈으로 구매할 여력이 생기니, 어린 시절 언제나 먹고 싶던 구슬 아이스크림에 대한 양적인 과소비를 보이는 것이다.



사진: 황서연 기자

▲기자가 ‘메론소다 레시피’대로 주문한 음료



사진: 신지원 기자

▲유명 도넛가게에서 산 도넛을 들고 있는 기자

실제로 지금의 청년들은 어린 시절, 하드바 아이스크림보다 비싼 구슬 아이스크림을 비교적 마음껏 먹지 못했던 아쉬움의 추억을 가지고 있다. 청년들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동시에, 충분히 구슬 아이스크림을 즐기지 못한 과거를 회상하고자 최근의 대용량 구슬 아이스크림을 찾는 것이다. 이영애 교수는 “MZ세대가 과거의 어린 시절에는 소비의 주체가 아니었기에 양껏 먹지 못했지만, 지금은 의사결정자이자 소비의 주체가 돼 아쉬움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삭한 과일에 빠지다

과일에 설탕 시럽을 코팅해 바삭한 식감으로 청년을 사로잡은 ‘탕후루’도 유행한다. 최근 탕후루 열풍은 일파만파 퍼져나가 탕후루 판매 가게는 변화기에서 빠질 수 없는 풍경이 됐다. 꼬치에 꽂힌 형태를 가진 탕후루는 도심을 걸으며 다니며 식후에 간단히 먹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식사 후에 빵이나 케이크보다 비교적 무겁지 않은 간단한 입가심의 용도로 최적인 것이다.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1학년 재학 중인 서정은 학생은 “좋아하는 과일을 설탕 시럽과 함께



사진: 신지원 기자

▲기자가 대용 구슬 아이스크림을 손에 들고 있다.

더욱 달콤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자주 먹는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이러한 탕후루를 직접 만들어 보는 행위도 유행하고 있다. 과일을 꼬치에 꽂아 설탕을 녹인 시럽을 바르고 굳히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레시피가 청년들을 끌어당긴 것이다. 이러한 유행에 힘입어 기자도 직접 만들어 봤다. 탕후루로 만들어 먹고 싶은 과일을 구매하고 설탕을 준비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설탕을 녹여 만든 시럽을 과일에 발랐다. 그리고 시럽이 굳길 기다렸다. 정해진 시간이 되자 탕후루를 집어 한입 베어 물었다. 하지만 넘쳤던 기대는 이내 실망으로 바뀌었다. 탕후루 가게에서 사 먹던 바삭한 코팅이 전혀 아니었으며 쫄쫄쫄쫄한 식감 탓에 도로 뱀을 수밖에 없었다. 그냥 과일을 먹느니만 못한 맛이였다. 몇 번을 다시 시도해도 결과는 같았다. 실패였다. 아, 청년들이 탕후루를 비싼 돈 주고 사 먹는 이유가 여기 있었다. 탕후루 가게들은 청년들을 홀릴 나름의 ‘바삭함’의 기술을 갖추고 있었다. 서 학생은 “탕후루를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에 만들어 보려 시도했으나 설탕 시럽을 굳히는 게 어려워 다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사진: 황서연 기자

▲냄비에 설탕과 물을 2:1 비율로 넣고 중불로 끓인다.



사진: 황서연 기자

▲깨끗이 씻은 과일의 물기를 제거한다.



사진: 황서연 기자

▲과일 꼬치에 설탕 시럽을 얇게 바른다.



사진: 황서연 기자

▲기자가 직접 만든 탕후루

한성대신문 독자칼럼 모집

낙산에 올라 소리치는 당신의 생각

지원자격 | 한성대학교 재학생

주제 | 자유 주제

분량 | 제목 제외, 공백 포함 약 1,100자 (200자 원고지 기준 5.5매)

혜택 | 비교과 포인트 10pt 지급
칼럼이 신문에 게재될 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모집기간 | 상시 모집

접수방법 | 한글 프로그램으로 칼럼을 작성하여 hansungnews@gmail.com으로 제출

*제출 시 칼럼제목/이름/학과 및 제1트랙/학년/연락처/계좌번호 함께 기재

문의 |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인스타그램 @hansungnews

남겨진 이에게 드리워진 그림자

〈편집자주〉

1,229명. 지난 6월 한 달간 고의적 자해, 즉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 잠정치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타국에 비해 높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을 만큼, 자살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자살 이후 남겨진 사람들, '자살유족'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관심 밖이다. 가족이나 친구 등 중요한 주변인을 자살로 떠나보내고 일상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겪는 사람을 자살유족이라고 일컫는다. 자살유족은 죄책감이나 트라우마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자살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은 편이다.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국가적 차원에서 자살유족에 대한 지원 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자살유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개선돼야 할 점이 많다. 이에 본지는 현행 자살유족 지원 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본다.

김유성 기자 meteor11@hansung.ac.kr

사진 : 박희진 기자

자살유족에 대한 정의는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 고인의 친인척, 친구, 애인 등 가족과 지인만을 지칭하기도 하고, 고인의 지인은 아니지만 자살 소식을 접하거나 목격한 이후 정신적 영향을 받은 사람을 자살유족으로 보기도 한다. 범위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정신적인 영향을 받고 고통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조성돈(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교수는 "자살에 영향을 받는 존재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이상으로 퍼져 있다"며 "친구나 가까운 동료, 지인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살유족은 '자살생존자'라고 불리기도 하는 등 통일된 명칭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자살생존자는 자살을 시도한 이후 생존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기에, '자살유족'이라는 표현을 지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지혜(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후관리지원부) 부장은 "자살 생존자의 의미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법령에서도 유족이라고 지칭하기 때문에 자살유족이 적절하다"고 전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자살유족에 대한 통계가 작성되지 않고 있어 정확한 규모도 알기 어렵다. 다만 자살 1건당 5~10명의 자살유족이 발생한다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의거하면, 자살유족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추산할 수 있다. 약 1만 3천여 명의 자살자가 발생한 2021년에는 자살유족이 6만 5천~13만여 명이 발생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조 교수는 "현장에서 자살유족 모임을 가져 보면 직계 가족 외에도 가까운 친척, 친구가 유족으로서의 아픔과 위험을 가지고 오는 경우를 자주 본다"며 "그렇다면 자살 1건당 발생하는 자살유족의 수를 10명으로 보는 것도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살유족의 자살위험은 자살유족이 아닌 사람에 비해 높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었음수록, 서로 주고받은 영향이 많은 사람이었음수록 자살위험도 높아진다. 삼성서울병원이 발표한 「자살유가족 지원방안 연구(2018)」에 따르면, 자살유족에게 자살 계획을 세운 경험이 있는지 물었을 때 '있다'는 응답이 22.7%, '없다'는 응답이 77.3%였다. 일반인의 3.3%가 '있다'고, 96.7%가 '없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했을 때, 자살유족이 자살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살 시도 경험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도 자살유족의 20.5%가 '있다'고 응답했지만, 일반인은 3.3%만이 '있다'는 답변을 남겼다. 육성필(서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위기관리상담전공) 교수는 "자살유족은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취약한 상태에 놓인다"며 "가족 내에서 자살이 발생할 경우 자살을 문제 해결의 한 방식으로 학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자살유족은 일반인에 비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 쉽지만, 사회적 차원의 지원과 보호는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자살 고위험군'의 자살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살유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병철(한림대학교강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자살유족이 겪는 충격은 이성적 판단을 어렵게 해 일상 속의 일반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것도 힘들게 한다"며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자살유족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자살유족 지원을 위해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자살이 발생하면 기관이 먼저 자살유족을 찾아 행정·경제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인의 장례 등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밟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며, 고인 사후 남겨진 자녀의 학자금 지원, 함께 거주하던 사람이 자살한 경우 일시 거처 마련을 위한 급전적 지원 등이 이뤄진다.

'자살유족 동료지원 사업'도 이뤄지고 있다. 자살유족이 또 다른 자살유족을 도울 수 있도록 동료지원 활동을 발굴하고, 자조모임 등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한다. 자조(自助)모임이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살유족 간의 모임으로, 서로 아픔을 공유하며 치유해 나가기 위해 모이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원 사업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서비스는 전국 17개 시도 중 9개 시도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수혜를 입을 수 없다는 지적에서다. 서 부장은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서비스는 자살유족이 사별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조모임 또한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자조모임은 각 지역에서 운영되는 자살예방 및 자살유족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주선하는 형태다. 이 같은 자조모임은 모임의 횟수가 적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 달에 한 번, 적게는 분기당 한 번 열리는 자조모임은 대부분 치유를 위해 운영되다 보니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치유가 이뤄져 사람들이 떠난다. 조 교수는 "모임에 몇 번 나오다 떠난 사람들과 지속적인 연결을

통해 그들의 어려움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결국 자살유족이 먼저 자조모임이나 커뮤니티 등을 찾아다녀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죄책감을 포함한 다양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 놓인 자살유족은 자신이 자살유족임을 선뜻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기관의 자조모임에 대한 제의 또한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살유족인 김혜정(자살유가족과파똥한친구들) 대표는 "자살유족은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하고 무엇을 했느냐'는 질책을 받을까 봐 두려운 기분을 느끼기도 한다"며 "자살유족이 스스로를 자살유족이라고 노출하는 일은 용기가 필요하기에 적극적인 자조모임 주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살유족 지원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각 지역에 전문 상담이나 자조모임 주선 등 자살유족 지원 업무와 자살예방 업무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에 전문성을 갖춘 실무자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에서는 사회복지전문공무원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 내용을 정할 때 자살유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자살유족 지원에 대한 사항이 필수적으로 교육되지 않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자살예방상담전화' 또한 운영되고 있지만, 전화 응대율이 2020년 기준 36.3%에 그친다.

일각에서는 담당 인력에 변동이 발생하는 부분 또한 문제라고 꼬집는다. 자살유족과 전담 사회복지사 간에 신뢰 관계가 형성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고려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자주 바뀌는 직원에게 자살유족이 자신의 마음을 쉽게 드러내고 도움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자살유족에 대한 미비한 지원이 예산확보와 관련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인력이 부족한 것 또한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치 않기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2025년까지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서비스의 전국 확대를 위해 2023년 예산이 배정됐다가 무산돼, 확대가 어려워졌다. 육 교수는 "정부나 시민들이 자살의 심각성과 자살유족의 고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살유족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가로막는 또 다른 요인은 자살 및 자살유족에 대한 그릇된 사회적 인식이다. 대부분이 자살을 개인의 문제 혹은 가정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유족에게 사회·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자살이 벌어지는 까닭이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연관돼 있고, 그 수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조 교수는 "자살 위험이 높은 자살유족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자살예방"이라며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나종호(예일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 또한 "자살을 사회적 죽음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우리 사회에서 자살 예방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자살위험이 높은 자살유족을 보호하는 것은 그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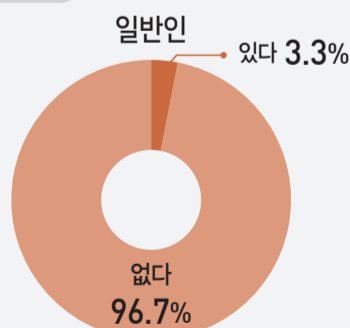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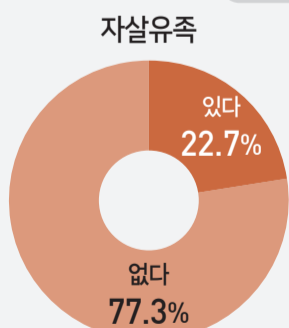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자살유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 편성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말한다.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서비스의 확대를 포함한 자살유족 지원 사업 확대, 인력 확충 등이 이뤄지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서 부장은 "예산이 확보된다면 자조모임이 확대되거나 전문 상담이 가능해지는 등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자조모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모임의 형태가 다양해져야 한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현재 공공기관 주선으로 진행되는 자조모임 다수는 심리적 치유를 주목적으로, 대화나 상담 등의 활동에 그친다. 나아가 자살유족의 사회적 고립 해결과 인간관계 재연결을 위한 활동적인 모임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실제로 자살유족 정기모임과 문화행사 등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조 교수는 "영화 감상, 식사 등 활동을 곁들여 대화하다 보니 더욱 친숙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유족이 늘었다"고 술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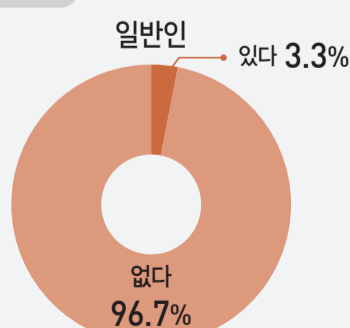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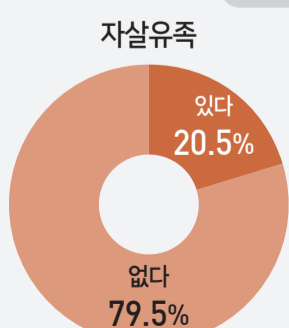
자살유족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자살을 언급하는 것조차 꺼리는 풍토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자살에 관한 담론을 드러냄으로써 자살률이 높은 것이 사회적인 문제임을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자살유족도 자살 문제의 당사자로서 사회나 국가에 당당히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변화돼야 한다. 풍토 개선을 위해서는 대학을 포함한 학교의 자살 인식 관련 교육이 우선 개선돼야 할 것이다. 이때는 토론 방식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된다. 자살 문제에 대해 거리낌 없이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자살유족의 고통을 알아주는 마음과 태도가 위험에 처한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교육이 개선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족과 일반인 자살 위험 차이 비교

자살 계획 경험 여부



자살 시도 경험 여부



*표본 : 자살유족 272명, 일반인 5,200명
 *자료 출처 : 삼성서울병원 「자살유가족 지원방안 연구(2018)」
 *고인과의 사별 기간이 1개월 이상 경과한 2촌 이내의 혈족과 배우자 또는 고인과 동거했던 4촌 이내의 혈족 중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자살유족으로 정한 통계입니다.

Next Level : 자율주행 시대

박희진 기자 furi1120@naver.com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

어릴 적,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스스로 다니는 도시의 모습을 그려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9월, 오는 2027년까지 운전자 없는 주행이 가능한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해 자유로운 이동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일용(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자율주행차는 머지않은 미래에 보편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많은 문화가 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준(KAIST 초전도체미래리더대학원 AVE 연구실) 연구원은 “자율주행은 운전자의 편의 증대뿐만 아니라, 인간 운전자의 실수로부터 비롯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사람없이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의 원리는 무엇일까. 먼저 ‘자동’과 ‘자율’의 기술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자동과 자율은 기술 분야 용어로서 확연한 의미 차이를 보인다. 자동은 입력된 데이터에 따라서 정해진 규칙만 따르는 상태다. 반면 자율은 상황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ITS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남두희(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는 “자동차에서 자동주행은 운전자가 항상 운전해 개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지만 자율주행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가 움직이는 원리는 크게 ▲인지 ▲판단 ▲제어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인지’ 기능은 인간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며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감지한다.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 등의 ‘센서’들이 차량에 달려 있어 볼 수 있는 범위에 있는 주변 물체를 감지한다.

‘레이더는 전자기파’를 발사한 후 반사돼 오는 전파를 분석해 주변 사물과의 거리와 속도, 방향 등의 정보를 추출해 도로 상황을 인지하는 센서다. 레이더는 날씨와 시간 등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을 사용하기에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레이더는 라이다에 비해 정확도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전 교수는 “일반적으로 라이다는 카메라 없이도 비교적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레이더는 카메라와 함께 사용해 정확도를 높인다”고 설명했다.

라이다는 전파 대신 빛을 보내고 받으며, 빛이 나갔다 들어오는 시간을 계산해 주변 사물의 위치와 방향을 알아낸다. 라이다는

레이더에 비해 방향과 거리 측정의 정확도가 높은 편이지만, 기상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박태희(동명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라이다는 사물의 형태와 각도를 정밀히 측정하고 속도가 빠르지만, 비나 눈 등 기상 악화 시에는 성능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전했다.

레이더와 라이다가 가진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율주행에서는 복수의 감지 기술을 통해 주변 환경에 대해 정확한 지도를 생성하는 ‘센서 퓨전(Sensor Fusion)’이라는 기술이 다수 채택된다. 이 연구원은 “눈과 비가 많이 오는 환경에서는 레이더의 측정치를, 날씨가 맑은 환경에서는 라이더의 측정치를 우선시 고려하는 방법이 있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또한 “자율주행차는 라이더와 레이더와 함께 사용해 정확하게 주행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을 위한 주행환경 파악에 있어서 카메라를 통한 영상인식 기술 또한 빠질 수 없다. 차선과 같이 도로 위에 밀착되어 입체감이 없는 요소는 레이더나 라이더의 방식으로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에는 렌즈가 1개인 ‘모노 카메라’가 사용되기도 하고, 2개의 카메라를 하나로 묶은 형태이거나 2개의 렌즈가 장착된 ‘스테레오 카메라’가 쓰이기도 한다. 모노 카메라는 2D 정보만을 파악할 수 있지만, 스테레오 카메라는 인간의 양안시와 같은 원리로 원근에 대한 정보가 추가된 3D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전 교수는 “사람이 두 눈으로 원근을 판단하는 것처럼, 스테레오 카메라도 왼쪽, 오른쪽 각각의 이미지를 조합해 3차원 영상을 만들어 낸다”며 “모노 카메라와 달리 물체의 종류 상관없이 인식할 수 있으며, 물체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찾아낸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레이더, 라이더, 카메라 등의 센서는 장애물 너머의 사물까지 보는 것에 한계가 있어, 인터넷 기술을 통해 저장된 데이터 정보를 수신해 교환하고 통신하는 ‘사물인터넷 기술(이하 IoT 기술)’을 함께 사용한다. 이 연구원은 “센서만으로는 높은 울타리가 있는 사거리에서 울타리 너머 수직 방향으로 접근하는 다른 차량을 인지할 수 없다”며 “IoT 기술을 통해 센서가 보지 못하는 차량이 어디에서 어떤 속도로 접근하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다양한 방식으로 ‘인지’ 단계를

거친 다음 ‘판단’ 단계로 넘어간다. 판단 기능은 자율주행차의 ‘뇌’ 역할을 맡는다. 앞서 설명한 센서들로부터 받아들인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한다. 판단 과정은 인간이 아닌 기계가 생각을 통해 운전 전략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머신러닝 모델’과 ‘딥러닝 모델’ 인공지능을 이용해 인지 단계에서 얻은 데이터를 파악하고 이해한다.

머신러닝 모델은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하는 방식의 인공지능이다. 인간처럼 스스로 생각을 확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부정확한 예측이 나오는 경우 인간이 개입해 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자율주행차에서 머신러닝 모델은 인지 단계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 더욱 능숙하지만, 부정확한 예측이 나와 그 결과 값을 인간에게 떠넘기는 경우 엔지니어가 개입해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딥러닝 모델은 머신러닝 모델과 달리 스스로 예측의 정확성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인간의 개입이 불필요하다. 하지만 딥러닝 모델은 예측과 결과를 내는 과정에 인간이 개입하지 않기에, 딥러닝 모델이 왜 그러한 결과를 도출했는지 알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 이 연구원은 “딥러닝 모델로부터 어떠한 결과를 얻었을 때, 왜 그러한 결과를 도출했는지 인간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각각의 특징들로 인해 전문가들은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머신러닝 모델과 딥러닝 모델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연구원은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사람이 이해하고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머신러닝 모델과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해 좋은 결과를 내는 딥러닝 모델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며 “최근에는 이 둘을 융합하는 연구도 많이 진행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마지막 ‘제어’ 단계는 인간의 ‘신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해당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이 인지하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면, 시스템이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는 등 차량을 제어한다. 상술한 인지와 판단 단계 이후 제어 단계를 통해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것이다.

*전자기파 : 전기가 흐를 때 그 주위에 발생하는 전기력이 전달되는 공간과 자석이나 전류에 의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주기적으로 바뀌며 나타나는 파동

미래를 여는 제주



▲제주 ‘탐라자율차’의 외관

자율주행차를 체험해 보기 위해 제주로 향했다. 기차가 제주로 향한 이유는 다름 아닌 국내 최초 민간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시한 ‘라이드플렉스’ 본사가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라이드플렉스가 제주에 본사를 둔 이유는 무엇일까.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이가 많고, 도내 대중교통이 다소 불편하기에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제주의 특징이 첫 번째 이유다. 복잡한 도심의 도로환경과 변화무쌍한 기상환경 등도 라이드플렉스가 제주로 온 이유다. 한마디로, 작은 면적 안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이 조성돼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라이드플렉스는 제주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시험하고 있다. 김윤관(라이드플렉스) PM은 “자율주행 기술의 도입을 통해 이동수단의 발전 방향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와 운전 시간 또한 감소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듣기만 해서는 원리를 이해하기 어려운 자율주행차, 그 기술력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파악하려면 자율주행차를 기차가 타보는 수밖에 없다. 제주 관광객과 지역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인 ‘탐라자율차’를 타고 직접 제주 해안도로를 약 40분간 달렸다.

운전석엔 라이드플렉스의 엔지니어가 동행했다. 차량이 출발하고, 달리는 모습을 지켜보니 운전자가 필요한 이유를 알았다. 자율주행이더라도 아직 수동 주행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을 지날 때, 정차된 차량이 길을 막고 있을 때, 도로에서 공사가 벌어질 때 등 도로 위 다양한 변수가 수동 운전을 필요로 했다. 시스템에서 수동 운전 모드로 전환한다는 신호를 주자 운전석에 앉은 엔지니어가 직접 운전대를 잡는다. ‘지금의 기술력이 이렇게나 잠깐씩 운전해도 되는 정도라면, 미래에는 운전석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차량 내부에 설치된 모니터로는 자율주행차의 인지 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시간으로 3D 지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도 실시간으로 기동 모양으로 보이고, 건물들은 직사각형 기동으로 나타난다. 사람이 아닌 작은 동물들도 인지하는지 엔지니어에게 물어보니, 크기에 따라 다른데 작은 경우에는 아직 인지하지 못한다고 한다. ‘아직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더욱 발전된 기술을 통해 ‘로드킬’도 사라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자율주행차, 아직 상용화까지 한참 남은 기술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제주의 사정은 달랐다. 대중교통처럼 제주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지정된 정류소에서 내릴 수 있는 서비스부터, 공항 혹은 숙소에 맡긴 짐을 배송해 주는 자율주행 물류 서비스까지 가능한 탐라자율차를 이용할 수 있다. 제주로 떠난다면 자율주행차로 한층 더 편리해질 우리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것은 어떨까.

제주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 초청으로 진행하는 ‘서울권대학연인연합회 제주 팸투어’에 참여해 작성된 기사입니다.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삼 학 송 · 언론에게 봄이 오기는 올까요

누구에게나 떠올리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다. 언론사에게는 정권을 비판한 언론인에게 부당한 징계가 내려지게 하고, 정권과 성향이 다른 언론인을 찾아내 퇴출할 대상으로 정해놓고는 이를 '인적쇄신'이라 칭하던 시절이 그러하다. 그 시기가 점점 다시 돌아오고 있는 듯하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되면서 현 정부가 언론 장악을 시작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니 말이다.

이 위원장 취임 이전부터 현 정권은 언론 장악의 발톱을 드러내고 있었다. 첫 타겟은 공영방송이었다. 지난달 14일, 한국방송공사 KBS의 남영진 이사장이 해임됐다. 뒤이어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도 시도했지만, 법원이 해임 처분에 효력정지 선고를 내려 좌절됐다. KBS·MBC 두 공영방송 사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를 모두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는 시도다. 이미 KBS 이사회는 김의철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한 상태다.

이 위원장 취임이 언론 장악을 가속화시키는 모양새다. 지난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만드는 언론사를 한번에 폐간할 수 있다며, '웹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언론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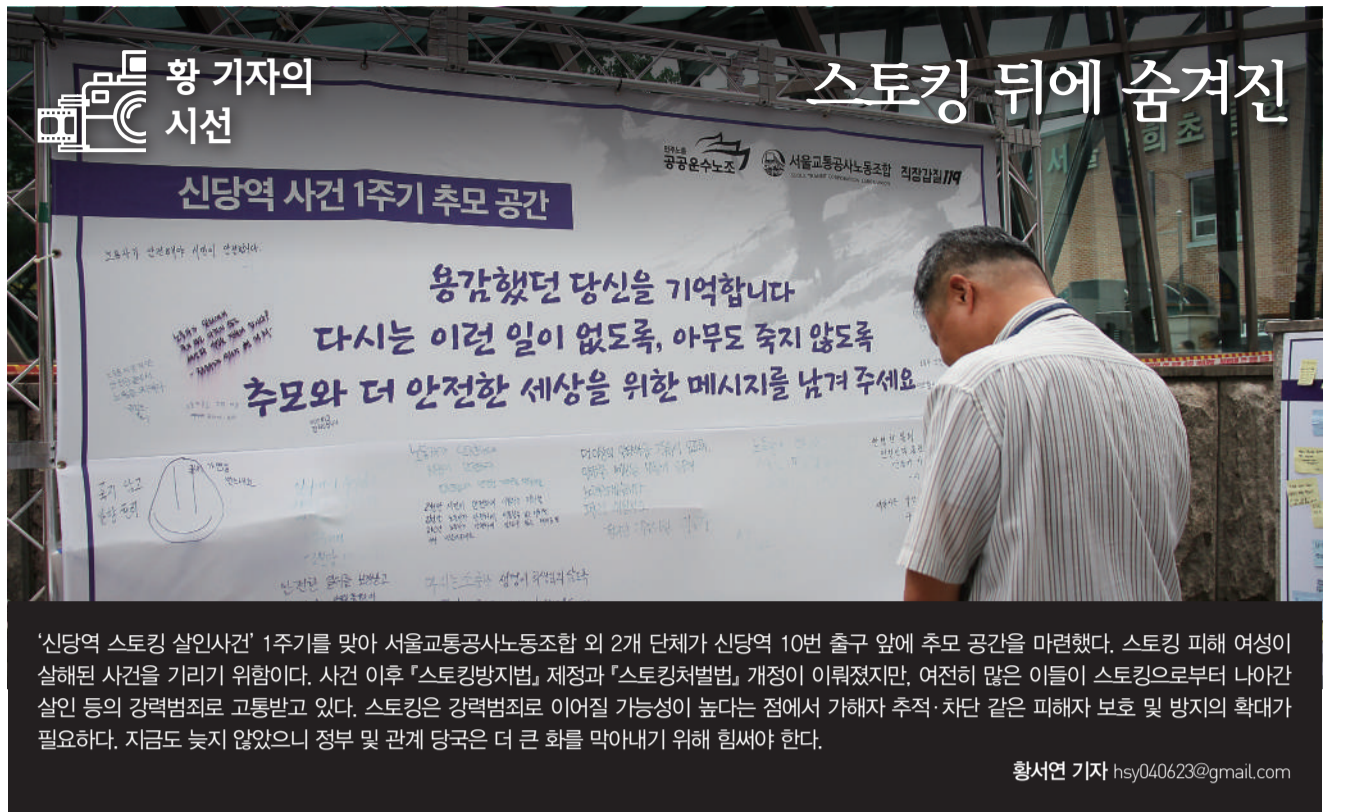
있다. 당연하게도 행정부가 언론사를 폐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또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의 팩트체크 시스템을 검증하는 등, 직접적인 행정력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자칫 잘못하면 검열이 될 수 있다. 정부 주도의 표현물 검열의 또다른 형태인 것이다.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주요 역할을 제약할 우려가 크다.

기성언론의 활동이 바로 서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대학언론이라고 다를 바 있겠는가. 대학언론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칠 때 기성언론이 모범과 표본이 될 만한 사례가 되기 어렵다. 앞으로 펼쳐질 '가시밭길'을 함께 걱정해야 하니 말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은 본질을 지키는 것이다. 언론의 본질이라 함은 사실을 전달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다. 언론이 가장 걱정해야 할 존재는 독자라는 말이 있다. 본질을 지키며 사실을 전달하고, 학내 구성원의 눈과 귀가 될 때, 독자의 관심은 곧 언론이 전하고 싶은 말을 전할 수 있게 하는 도화선이다. 기성언론과 대학언론이 아무런 걱정 없이 독자 생각만 하며 기사를 작성할 그 날을 기다리겠다.

정상혁 편집국장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맞아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외 2개 단체가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 추모 공간을 마련했다. 스토킹 피해 여성이 살해된 사건을 기리기 위함이다. 사건 이후 '스토킹방지법', 제정과 '스토킹차별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스토킹으로부터 나아간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고통받고 있다. 스토킹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가해자 추적·치단 같은 피해자 보호 및 방지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정부 및 관계 당국은 더 큰 화를 막아내기 위해 힘써야 한다.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 기자수첩

〈한성대신문〉의 8면을 모두 꼼꼼히 읽어내는 독자는 몇이나 될까. 지난 학기까지 필자는 신문을 2번은 넘겨야 등장하는 '문화'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문화는 내가 제일 잘 알지' 코너를 연재하며 문화면까지 도달한 독자와 소통하고 싶었다. 문화의 '부드러운 힘'을 믿었기 때문이다.

해당 코너는 청년들이 향유하는 문화를 기자가 직접 체험하고, 청년들의 행동 양상을 분석해 원인과 전망을 제시했다. 또래 독자의 견문이 확장되는 창으로, 타 세대에게는 청년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다리 역할도 맡았다.

코너에서 다루는 기사의 소재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유행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면 낭비가 아닌지 의문을 품은 독자도 존재했다. 하지만 단순히 유행만을 좇아 전달하

문화면을 펼치자

는 기사가 아니었다. 일례로 아이돌 덕질 문화를 소재로 기사를 작성했을 때, 돈과 시간을 무분별하게 낭비한다는 기성세대의 시각을 변화시키고자 원인 분석에 힘썼다. 결과적으로 덕질 문화의 기저에는 그 세대가 그들끼리의 커뮤니티를 형성한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분석하는 기사를 작성할 수 있었다. 실제로 극심해져만 가는 세대 갈등 속 청년 세대를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는 피드백도 받았다.

우리 신문만의 문화기사가 청년 세대를 대변하고, 세대 간 소통 창구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타 학보사의 문화 기사와 기성 언론의 문화 기사 등이 어찌든 모두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윤희유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정치·경제·사회·문화와 같은 기사 분류 속 정치, 경제 그

리고 사회 문제까지 해결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문화에 존재할 수 있다.

현재 필자는 후배 기자에게 해당 코너를 위임했고, 기성 언론에서 기자로 일하겠다는 계획도 없다. 그렇지만 사회 어딘가에서 문화의 부드러운 힘을 믿으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싶다. 각종 갈등이 발생하고, 혐오하고, 또 배척하는 지금, 필자의 이야기가 비현실적인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진정한 이해가 아니라 강력한 제도뿐이라면 절망적이지 않은가.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이해해 보기 위해 지금부터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알아가 보자. 문화면을 펼치자.

박희진 기자 funi1120@naver.com

■ 낙산에 올라

얼마 전 보고 싶은 영화가 생겨 몇 년 만에 표를 예매하려 가격을 봤더니 다소 충격적이었다. CGV에서 성인 기준으로 평일 오후엔 13,000원이며 주말에는 무려 15,000원이었다. 코로나 시국 이전인 2019년보다 4,000원 인상된 금액이며 이는 넷플릭스의 프리미엄 구독료와 맞먹는 가격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가격 인상에 영화 소비자들을 등을 돌리고 있다.

먼저, 가격 인상의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코로나 여파로 발생한 손실을 채우려는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영화관 시장 1위인 CGV의 영향도 크다. 2016년 CGV는 튀르키예 1위 영화관 업체 '마르스 엔터'를 무리하게 인수하며 3천5백억 원에

이 돈이면 넷플릭스가 몇 개월?

달하는 금액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으며 뒤이어 동남아에 영화관 사업을 확장하다가 차질이 생겨 빛이 더해졌다. 이렇게 여러 이유로 발생한 손실을 매꾸기 위해 CGV는 관람료를 인상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이에 따라 관람료 인상에 나선 것이 문제다. 압도적으로 시장 1위를 달리던 업체가 가격을 인상하니 똑같이 돈을 벌기 위해 덩달아 따라간 셈이다. 결국, 이런 상황이 쌓여 현재 극장표 값이 매겨지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가격 인상이 매출에 도움이 될까? CGV는 거리두기 해제 직후 식음료 매출이 186% 가까이 상승했고 천만 관객을 들

과한 영화도 간간이 등장하며 언뜻 불경기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변해버린 인식이다.

인상된 가격에 비해 영화관 시설과 품질은 몇 년 전과 다를 바 없으니 많은 불만이 쏟아진다. 또한, 극장에 방문해 영화를 보는 것보다 OTT 서비스를 구독해 집에서 편하게 시청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으니 현재는 OTT가 영화관의 보완재가 아닌 대체재가 되어가는 추세다. 하지만 아직 극장에서 영화를 찾는 사람들이 남아 있기에 영화관 업체들은 극장을 다시 일으키고 관객들도 다시 끌어들이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이준철(문론 2)

■ 의화정

낭중지추(囊中之錘)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기(史記)의 평원군전(平原君傳)이 출전이며,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입니다. 즉, "송곳이 주머니를 뚫고 나오는 것처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아무리 숨어 있어도 저절로 드러나기 마련이며,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남의 눈에 띄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네이버 사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 학기 초나 학기를 마무리하는 학기 말에 낭중지추를 설명하며, 또 다른 해석의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전합니다. 진실은 아무리 숨기려고 하여도 반드시 밝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진실은 송곳이 주머니를 뚫고 나오듯이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진실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생활하라는 이야기를 제 수업

낭중지추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꼭 합니다. 한성대에서 교편을 잡은 지도 이미 15년이 넘어서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졸업할 것입니다. 얼마 전, 저희 경영학부 졸업생 중 한 분이 미국에서 은행에 취업하겠다고 저에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선생님의 입장에서 가장 즐겁고 기쁜 일은 제자가 잘되는 것입니다. 너무 기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특히, 저에게 연락을 주면서, 제가 평소 이야기하였던 낭중지추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진실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열심히 생활하겠다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물론, 원전에 따른 의미는 아니지만, 제가 교육하고 전하는 의미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의 이정표로 삼고 생활하는 제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하였습

니다. 어찌 보면, 영원히 숨길 수도 가릴 수도 없는 것들이 저희들의 삶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소소한 일상이 모여서 일생이 되고, 그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모여서 저희들 삶을 지탱해 주고 이끌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예전에 슈퍼컴퓨터가 하는 작업의 10배, 100배 이상의 빠른 속도로 업무를 처리하고 발전해 가는 현대 사회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삶은 언제나 고전을 통해서 반추하게 되고,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서 인생을 완성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소중하게 여기며 진실하며 바르고 정직하게 생활하여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이만 글을 마무리합니다.

이형용(사회과학부) 교수



박희진 기자 funi1120@naver.com

동정란

신재흠(교육대학원) 교수

신 교수는 지난 9월 5일 「영유아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유치원 및 어린이집 경영 탐색-」 도서를 출판했다.



한성대신문 오피니언면은 학내 구성원의 참여로 이뤄집니다.

제38회

한성문학상 현상공모

당신의 글이 모두에게 전해지길

모집기간

2023년 9월 18일(월)
~ 10월 20일(금) 오후 6시까지

참가대상

본교 학부 재학생

주 제

자유 (주제에 제한이 없음)

제출형식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시 - 5편 이상

제출방법

hansungnews@gmail.com로 제출
(e-mail로만 접수 가능)

제출사항

응모작, 참가신청서
(교내 홈페이지 '한성공지'에서 다운로드)

발 표

한성대신문 595호 (12월 4일 발행)

시상내역

단편소설 - 60만 원 및 상장 (가작 30만 원)
시 - 40만 원 및 상장 (가작 20만 원)

비교과 포인트

단편소설 응모 40pt, 시 응모 30pt
당선 후 수상소감 작성 시 10pt 추가 지급

문의사항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인스타그램 @hansungnews

- ※ 제출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다른 공모에 입상, 발표 사실이 없는 순수 창작물만 응모할 수 있으며, 중복 투고, 대필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상자격을 박탈함과 동시에 상금을 몰수합니다. 또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 당선작이 없을 시 가작만 시상합니다.

한성대신문